"기회발전특구 중앙 · 지방 협력을"

김관영 도지사, 한덕수 총리 주재 8개 기회발전특구 지자체장 간담회 참석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특구에 부여하는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설명회 개최 등 중앙과 지방 협력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확대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한 향후 특구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 특구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중앙-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라며,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對) 국민, 대(對) 기업, 대(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회 발전 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지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에 1차로 전북·부산·대구·대전·경북·경남·전남·제주 등 8개 시?도에 기회 발전 특구를 지정했다.

전북자치도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5일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4개 시별 특화산업인 바이오·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88만 평이 지정됐다. /이만호 기자

자치분권 강화 본격 시동

후반기 전북자치도의회, 국회서 정책 간담회 가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군산4)가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에선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간담에서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 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행정부에 비해 '지역의 국회'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관련 입법을 요청하고 나선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 개정 약속 지켜야"

민주 이성윤 의원,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 답변 받아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현행 대광법을 근거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지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전북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전북 지역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받지 못한다."며,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질의와 관련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라며,"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 · 전주 통합 반대에 대한 악마화 멈춰라"

완주군 애향본부 촉구

완주군 애향본부 정완철 본부장과 회원 19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2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최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완주-전주 통합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동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며, "엄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통합 반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주군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 세력 악마화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애향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본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8조와 9조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면서 정당 내지는 공직선거 후보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 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련 법은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같은 법 20조(투표 운동의 원칙)에서는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완주군 애향본부 정완철 본부장과 회원 19명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에 대한 악마화를 멈춰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통합 찬성측, 최근 완주군수 · 군의원 등 중립의무 위반 고소
애향본부, "완주군수 등은 법상 투표행위로 보지 않는다" 설명
"고소단체가 전주시서 보조금 받은 사실 있는지 내역 공개를"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1조에서는 제2항 제2호에서 공무원을 투표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라고 설시되어 있으며, 투표 운동의 기한이라 함은 투표일로부터 21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행정통합에 관한 일체의 적용 법규는 주민투표법이고 같은 법에서는 투표 운동의 기간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규정하면서 이 기간만 완주군수와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완철 완주군 애향본부장은 "이번 고소 건의 고소인에게 고소를 제기한 단체 대표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그 이유로는 고소인과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완주군 공직자 13명을 구속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의 단체가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받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이같이 악의적 고소를 유발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위의 단체에게도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 본부장은 끝으로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 전주 행정통합을 시작하던 초기에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군 역사복원 추진위원회의 대표가 완주군의 행정통합 반대 인사를 친일 행위에 비유해서 분노를 유발했으며,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방송토론에서 통합 반대 서명부에 대하여 고발 운운하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완주 전주 통합 상생협회'라는 단체가 완주군민들이 선출한 완주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악마화하는 묻지마 고소에 이르렀으며,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주장하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완주 전주 통합추진 반대 측)들은 통합추진 세력을 향해 고소 고발 등 비난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애향본부는 정완철 본부장과 유희성 사무국장이 이끌고 있는 단체로, 완주군 일원에 650 여명이 헌신적인 자세로 완주군 발전에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만호 기자

"원광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환영"

민주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원광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사업 본지정 사실을 전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요구하고,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통합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의 통합을 전제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혁신 비전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 글로컬 대학 지정으로 5년간 최대 1,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숨은 노력도 있었다. 지난 4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포함된 이후 한 의원과 원광대·익산시는 든든한 공조 체제 아래 본지정을 준비했고,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꼼꼼히 세워나간 끝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 의원은 "이번 글로컬 대학 지정은 원광대와 익산시, 전북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18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낸 성과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원광대가 대학혁신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2031년까지 연장

민주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35만9,959명에 달한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국힘 조배숙 의원, '낙태죄 입법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과 같은 당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28일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태아 생명 보호 운동의 방향성과 개신교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낙태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조병세 박사(1776연구소)·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가 패널로 참석해 법률 개정 방향 및 미국의 선례를 통한 교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는 태아의 생명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